

『남북경협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포럼

1. 포럼 기획 개요 및 목적

- 개요 : 현대경제연구원과 매일경제신문사 공동의 연간 포럼 개최(격월간)
- 목적 : 건국 60주년과 정권 교체를 맞이하여 새로운 남북 관계 형성과 바람직한 외교 정책 방향을 모색

2. 시기 : 4월 29일 (화) 오후 2 : 00 ~ 4 : 00

3. 장소 : 롯데호텔 신관 14층 비즈니스 센터

4. 주제 : 새로운 남북 관계 형성과 바람직한 통일·외교 정책 방향

- (1) 최근 한반도 주변 정세 변화의 특징
- (2) MB 통일·외교 정책 방향과 한계
- (3) 新남북 관계 정립 방향
- (4) 남북 경제 공동체를 위한 외교통일 정책 방향
(한미 및 한일 정상회담 평가 포함)

5. 포럼 참석자 (가나다 순)

- 사회 :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 원장
- 발제 : 현인택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일민국제관계연구원장)
- 토론 : 김일영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박기덕 세종연구소 소장
박명규 서울대 통일연구소 소장

북한 핵문제와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 방향

현인택 (고려대 교수)

○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은 창조적 실용주의에 바탕을 둔다.

- 무엇보다도 이념지향적이 아니다.
- 진보 vs. 보수의 시각에서 보면 잘못 이해한 것
 - 어떤 이념적 틀에서 대북정책의 틀을 만든 것이 아니다.
- 강경 vs. 유화도 아니다.
 - 기본적으로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기 위한 강경일변도의 정책도 아니며 또한 북한의 비핵화와는 상관없이 북한 정권에 유화일변도의 정책만을 펴는 대북 정책도 아님
 - 필요하면 지난 20년의 어느 대북정책보다도 더 유화적이며 유연할 수 있으며
 - 필요하면 그 반대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경할 수도 있다
 - 강경 대 유화의 이분법적 틀에서 보면 잘못 해석된 것이다.
- 정책의 세 가지 기본적 방향
 - 비핵화 정책
 - 비핵화만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담보한다는 생각
 - 여기에 타협은 없다
 - 공존정책
 - 80년대 말 노태우정부 이래로 현재까지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은 큰 틀에서 모두 공존정책이라 할 수 있다.
 - 다만 목적 지향성과 수단의 문제에서 달라짐
 -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도 역시 남북공존정책이다.
 - 공영발전 정책
 - '비핵·개방·3000정책'에서 특히 3000정책은 입발림이나 회유정책이 아니다.
 - 기본적으로 공영발전 정책이며
 - 큰 틀에서 한반도 평화공동체 정책

○ ‘비핵·개방·3000정책’은 이러한 정신을 반영하는 포괄적이며,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북정책이다.

□ 3단계의 발전 과정

- 1단계: 2.13 합의 완전이행
- 2단계: 완전한 비핵화에 이르는 중간과정
- 3단계: 완전한 비핵화 이행과정

□ ‘비핵·개방·3000’정책을 추구하는데 있어서 다섯 가지 원칙

- 비핵화우선
 - 대북정책의 기본 목적을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에 둔다.
- 철저하고도 유연한 대응
 - 이러한 대북정책의 목적에 철저하면서도 그 방법에 있어서는 유연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 최소한의 인도적 지원 계속
 - 이 과정에서 인도적인 지원은 비핵화 협상의 진전에 상관없이 계속해 나갈 것
- 경험은 핵문제 해결과 연결
 - 그러나 최소한의 인도적 지원을 넘어서는 수준의 경제협력은 핵문제의 진전과 연계시킬 것
- 비핵정책 포기 시 철저 대응
 - 만약 북한의 비핵화 정책을 포기할 때 이에 대해 국제사회에 협력하여 단호히 대응할 것

□ 이의 추진을 위해

- 국내적으로는 범정부적 추진 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으며
- 남북간에도 고위급 회담 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음
- 3단계의 완전한 비핵화에 이르게 되면 3000 플랜의 구체화를 위한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만들 필요가 있음

○ **이의 실현을 위해 6자회담 참가국들과 다양한 수준의 전략대화를 심화시킨다.**

□ 한미, 한일, 한중, 한러시아와의 양자간 대화

□ 한미일 삼자 대화

□ 북한의 통미봉남 전략은 성공할 수 없다.

- 한국정부는 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도 지지하지 않으면 그것이 한국을 배제하는 형태는 되어서는 안될 것
-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남북간, 미북간, 그리고 6자회담의 조화가 바람직

○ **북한은 핵문제의 해결과 국가발전을 이룩한 국제적 선례를 깊이 분석하고 '전략적 선택'을 해야할 것**

□ 북한은 현재 파키스탄식 해결 방식을 가장 바람직한 모델로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나 이는 이루기 매우 어려울 것

- 파키스탄 모델
 - “이루어질 수 없는 꿈”
- 리비아 모델
 - 김정일이 카다피보다 취약
 - 군부에 더욱 의존
 - 김정남의 신임 부족
 - 중국의 제2의 영국 역할은 날이 갈수록 어려워질 것
- 남아프리카 모델
 - 이것의 implication은 정권이 바뀌야 핵문제해결 된다는 것
 - 미국의 네오콘은 explosion을 생각한 것
 -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순조로운 정권이양의 경우
 - implosion 이나 또는 정권이양의 경우라야 핵 해결

- 북한이 동시에 생각해야 할 것은 소위 어떤 ‘발전모델’을 따르느냐 하는 것. 중국, 베트남 등의 모델이 있으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변화를 선택하지 않는 한 어떤 핵해결 모델도 북한에게 적합하지 않을 것

○ 북한은 시간이 자기편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 북한의 구조적 문제, 남북간의 격차, 21세기 국제질서의 모습 등을 볼 때 시간이 북한 편은 아님
- 북한의 현 상태가 자력으로 나아질 가능성은 매우 적음.
- 북한 핵위기가 진전된 지난 15년을 생각해 볼 때 남북간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계속될 것
- 6자회담의 어느 당사자도 북한 핵을 용인하지 않을 것
- 소위 ‘grand bargain’을 통한 핵문제의 해결로 정권의 안정성과 미래를 담보하는 것만이 북한에게 현명한 전략적 선택이 될 것
- 이명박정부는 ‘인내’를 가지고 기다릴 것. 그러나 그 시간이 무한정 주어지는 것은 아닐 것

< 남북경협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포럼 > - 전문 게재

□ 제2회 : 새로운 남북 관계 형성과 바람직한 통일 외교 정책 방향

○ 현인택 고려대 교수님 발표

북한 핵문제를 엿보는데 있어서 최근의 사태의 진전은 상당히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문제이다. 한국정치에 내적 변화가 있었고, 그에 따라 한미관계, 한미정상회담 계기로 변화하고 있고, 이런 가운데 북한 핵문제를 다루는 여러가지 상황도 많이 변화하고 있다. 지난번 싱가포르에서 미국, 북한 사이의 잠정적인 합의를 엮어서 미국 내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다. 북한과 시리아간의 핵 협력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어서 이것이 앞으로 북한 핵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있어서 중요한 전기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한다.

저희 측으로 보면 두 가지 다소 상충될 것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우선 북한 시리아 핵협력 의혹을 확실히 규명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더 완전하고 명확하게 해나가야 하는 하나의 목적이 있고 그와 동시에 현존하는 6자회담의 틀을 깨지 않고 추동력을 이어나가야 한다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 여기에는 어떤 해답은 없고 다만 우리가 목표를 분명히 정하고 그 목표에 맞춰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핵 협력 의혹은 단순히 과거의 문제는 아니고 문제는 미래형으로 진전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문제도 확실하게 이번에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재현될 소지가 충분하다.

그간의 여러가지 다른 평가가 있었는데 새 정부의 대북정책은 강경 정책으로 회귀가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다. 대북 정책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나온 것이다. 지난 15년 핵위기를 보면 계속해서 핵위기가 타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위기의 인식하에서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뚫고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면서 한반도 평화 안전을 장기적인 차원에서 모색하는 사고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나온 것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다.

창조적 실용주의는 대북관계를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보면 북한의 비핵화를 이

루고 한반도의 긴 미래를 보면서 남북이 같이 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것이 대북관계에서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기존의 이데올로기적인 틀에서 문제를 봐서도 안 되고 단순히 강경 보수 틀에서 보면 안 된다.

이명박 정부의 정책은 세 가지 기본적인 방향이 있다. 첫째, 비핵화를 우선하는 정책이다. 철저히 한반도 비핵화가 우리가 이뤄야 될 중요한 목적 중 하나이다. 대북정책의 전부는 아니지만 대북정책의 가장 중요한 기둥인 것은 분명하다. 둘째, 지난 노태우 정부 이후 우리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을 무엇이나고 질문한다면 그래도 공통적인 것은 공존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해석 있을 수 있겠지만, 목적 지향성과 수단의 문제에서 달랐을 뿐이다. 이명박 정부의 정책은 결과적으로 남북 공존정책의 틀의 연장선에서 볼 수 있다. 셋째, 비핵·개방·3000은 공영발전 정책이다. 남북이 같이 살자고 하는 정책인 것이다.

특히 3000 정책은 입발림이나 회유정책이 아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려고 하는 것이다. 이는 3단계 발전과정으로 이어진다. 1단계는 2.13 합의 완전 이행이며, 2단계는 완전한 비핵화에 이르는 중간 과정, 3단계는 완전한 비핵화 이행 과정이다. 이를 추구하는데 있어서는 5가지 원칙이 있다. ① 어떤 상황에서도 비핵화를 추진한다는 것, ② 그러나, 이것을 너무 경직되게 추구하지는 않을 것, 방법은 상당히 유연한 방법으로 할 것, ③ 최소한 인도적 지원은 계속할 것, ④ 최소한의 인도적인 지원을 넘어서는 수준의 경제 협력은 핵 문제의 진전과 연계시킬 것, ⑤ 비핵정책 포기 시에는 국제사회와 협력하면서 철저히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5가지 원칙에 따라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① 국내적으로도 범정부적 추진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외교 안보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경제, 인프라, 복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다룰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 ② 남북한 협의체가 필요하다. 국제적인 협력 네트워크도 만들어야 한다. 큰 틀에서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③ 국제협력을 위해서는 6자회담 참가국과 다양한 협력이 필요하다.

북한은 핵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북한의 미래에 대한 발전모델에 대해서 선택을 해야 한다. 다른 모델이 있지만, 북한이 선택을 하면 북한의 독특한 모델이 될 수 있다. 현재 북한은 파키스탄식 해결 방식을 선호하는 것 같다.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라고 생각한다. 파키스탄과 북한은 전략적인 환경도 다르고 국내적인 환경도 다르고 현재 남북관계의 주변 환경도 다르기 때문에 북한이 택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이 리비아 모델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도 선택하기 어려운 모델일 수 있다. 북한은 비핵화로 가는 선택 이외에 대안이 없다는 인식하에서 그 방법을 북한의 유리한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다른 방법을 택할 도리는 없다.

북한은 자기의 발전모델을 선택해야 한다. 따라서, 이 발전 모델과 핵 해결 모델 두 가지를 북한이 조합해서 추구하지 않는 한, 핵문제 해결은 요원해진다. 북한의 두 가지 발전 모델로 중국 모델과 베트남 모델이 논의되는데 긍정적인 방향은 이런 모델이라고 생각한다. 이도 저도 아닌 선택을 하면 긍정적인 미래는 오기가 어렵다고 생각한다. 북한이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변화를 선택하지 않는 한 어떤 핵 해결 모델도 북한에게 적합하지는 않다.

북한이 시간은 자기편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북한 위기 속에서 남은 것은 소량의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었고 세계 위협은 커졌지만, 이는 북한이 살아가는 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국제사회는 회의적으로 평가한다. 북한이 핵을 가진다는 것이 북한 스스로의 발전에 어떤 의미를 가지나? 라는 질문에 대해서 나는 굉장히 회의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남북한의 미래 안정 평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Grand Bargain을 통해서 핵문제를 해결하고,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결단을 내리는 것이 유일한 길이다. 이명박 정부는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는 데 시간은 마냥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국제사회의 환경도 지난 10~20년 전하고는 다르다. 6자 회담의 국가는 핵문제를 아무도 용인하지 않는다. 세계는 Globalize되고 있다. 세계 환경은 매우 다르게 바뀌고 있다. 핵도 가지고 정권도 유지하고 과거와 같은 호전적인 정책을 취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존속할 수는 없을 것이다. 방향은 정해져 있는데 그 선택은 북한이 해야 할 것이다. 빨리 선택할수록 북한에 유리할 것이다.

< 토론 >

○ 박기덕 세종연구소 소장

: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이 이데올로기도 아니고 등등 뭐가 아니다라고 말하지 말고, 무엇을 추구하는 지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 좋겠다. 이제는 때가 정치적인 언어에서 벗어나야 한다. 창조적 실용주의는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또 선거철에 나온 정책의 포장으로는 좋은 것이다. 과거 6.15선언 지지에 대해서는 일부 국민이 지지했다고 하더라도 일부의 지지는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완전 무시하는 방식은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난 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지난 10년에 대한 안티테제에 대해서 압도적인 지지도 했다. 이 포인트 중 하나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국민이 지지를 보낸 것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에 대해서 퍼주지도 말고, 대치하는 것도 하지 않는 것이 국민의 생각이라고 느낀다.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부드럽게 해달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라고 생각한다. 또, 이명박 정부가 유연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유연함의 폭에 대해서 잘 설정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디까지 유연해질 수 있는 지에 대해서 명확한 선을 그어주어야 혼란이 야기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박명규 서울대학교 통일연구소 소장

: 제가 보기로는 박 소장이 말한 것도 비슷한데, 새 정부가 이전 정부하고 입장이 달라지고 강조점이 변화하는 것은 공감하는 것이다. 그게 정권 교체의 효과이기도 하다. 약간의 우려는 이게 진보적인 것에서 보수로 가는 것을 우려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에서 정확한 정책적인 입지점이 될까 라는 불확실성이 있는 것 같다. 발표에서 보면 진보도 보수도 규정하기 어렵고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는 강경책도 선택할 수 있고 유화적인 것도 선택할 수 있다는 유연한 입장인 것 같다. 바람직한 방식이기는 한데 정책적으로 잘 조율되지 못하면 원칙없이 오락가락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 원장

: 예전에는 비핵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유화정책을 쓰고 교류도 하고 개성공단 사업도 했는데 지금 와서는 비핵화라는 것이 먼저 이뤄지고 나머지 지원을 하겠다는 수단과 목표가 달라진 상태이다. 이는 국민들이 비핵화가 절실하다고

느끼고 있고, 예전 수단과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해서 바뀐 것이라고 생각한다. 비핵화가 잘 진행되고 그게 마무리 되고 공존공영을 가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많은 사람들은 비핵화가 4~5년 동안 지지부진 하고, 남북관계가 정체되어 있으면 수단과 목표가 제대로 된 것인가 하는 비판이 강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남북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도 나올 것이다. 비핵화는 한미가 한 목소리를 내고 목적에 동의하는데 통일이나 남북관계는 미국, 한국 입장이 다른데 비핵화 지연시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 김일영 성균관대학교 교수

: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정책은 좋지 않다. 냉탕에서 온탕으로 왔다 갔다 하면 곤란하다. 김영삼 정부가 집권기 동안 냉온탕 혼란을 준 것에 비교하면 그다음 정권은 지속성에 대해서는 평가할 만한 가치가 있다. 정부가 바뀐 것과 정책의 지속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대두된다. 정부 바뀌면 정책 달라진다.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급격하게 변화하는 것은 우려가 된다. 대통령께서 업무보고 받으실 때 갑자기 왜 6.15나 10.4 정상 선언이 아니라 남북기본합의서를 들고 나왔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다. 현실적으로 기본합의서는 잊고 있었는데 왜 대통령이 가지고 나왔을까?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남북관계 개선이 사실은 지난 10년 동안 갑자기 6.15와 10.4 정상 선언에서 이뤄진 것처럼 생각하는 오해를 바로잡는데 있다고 생각한다. 사실은 1992년 기본합의서에서 더 올라가면 7.4 남북공동성명도 있지만, 기본합의서에서 기본적인 틀이 다 마련됐다고 생각한다. 이때 합의는 보수정권이 만든 것이기도 하다. 이런 의미에서 이것을 가지고 나와서 국민에게 이에 대해서 다시 환기시킨 것이라고 생각한다. 두번째는 6.15와 10.4 정상 선언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체인 기본합의서 정신을 강조하면서 6.15와 10.4 정상 선언 내용 중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받아들이지만,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것까지 받아들일 생각은 없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이다. 이는 부분적인 연속성, 단절성을 다 표명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6.15와 10.4 정상 선언의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은 구체화된 것도 있고 없는 내용이 추가된 것이 있다. 남북 교류에 대해서는 구체화된 것이 많다. 6.15 정상 선언 중 2항인 국가연합 등 내용에 대해서는 그 전에 없던 얘기고 여전히 뭘 얘기하자는 것인가 의구심도 있다. 그것까지 현 정부에서 계승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받아들이면 된다고 생각한다. 기본합의서 정신은 연속

성과 단절성 두 가지를 다 표현하는 좋은 내용이다.

○ 박기덕 세종연구소 소장

: 우선 이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국민적인 지지가 부족한 측면은 분명히 있었다. 공존공영과 평화는 지지했지만, 추진 방식이나 스타일은 국민들이 지지하지 않았다. 그런 의미에서 이전 정부와는 다른 정책을 정치적으로 천명하는 것은 당연히 옳은 선택이다. 이 선택이 대통령 당선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였다고 생각한다. 작년 워싱턴 방문 시 미국 싱크탱크 소장들과 만난 적이 있다. 이때 미국 전문가들과 얘기하면서 대체적으로 지난 노무현 정부가 하는 것들이 미국에서 받아들이기 곤란한 것과 우리가 받아들이기 곤란한 것들이 비슷하다고 느꼈다. 대북정책의 실현 과정에서 이를 수정하는 것은 당연히 옳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실용주의적인 접근, 창조적 실용주의를 하겠다는 것은 적절하고 좋은 정책적인 포장이다. 문제점은 북한과의 공존공영을 위한 정책이 야기하는 비용문제와 주는 방법에 대해서 국민들이 언짢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실용주의적 측면에서 보면 대북정책의 전략적 전환은 잘 한 것이고, 비용문제에 대한 고려도 정치적 언술로서 이제까지 잘해왔고 좋다. 이제는 실용주의적인 대북정책을 나와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기존의 축적된 대북외교의 정책적인 자산을 충분히 이용해야 한다. 예를 들면, 미국과의 관계가 훼손되면서까지 북한과 신뢰를 쌓은 것이 있는데, 미국과의 신뢰 회복하면서 북한과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실용주의적인 정책의 계절에는 양국의 관계에 있어서 유연하게 병행해서 추진하고, 정책적인 자산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

○ 박명규 서울대학교 통일연구소 소장

: 새 정부의 출범은 남북관계가 새로운 전기를 맞는 것이다. 북한에게도 새 정부 출범은 중요한 계기라고 생각한다. 북한도 민주화된 한국 사회에서 정권 교체가 제도적으로 일어날 텐데 제도화된 정권 교체의 고비고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인가의 문제와 그런 부분에서 어떤 책임을 지고 대응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 책임있는 선택을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북한에게도 새 정부 출범이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전반적으로 흔히 우려하듯이 새 정부가 강경 보수 일변이나 적대 정책으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고 유연하고 실용적으로 관계 개선과 미래지향적인 시선을 가지고 대북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실용성과 유연성의 원칙이 자칫 정책의 혼선으로 가지 않고 의미있는 실용적인 정책의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은 결국은 포용이다. 실용적인 유연성의 폭이 대북적대정책에서 친북까지 오고가는 폭을 가질 수는 없다. 그런 의미에서 현 정부의 실용적인 유연성이 적어도 가질 수 있는 폭과 관련해서 우리 사회 내부에도 중요한 메시지, 북한에도 중요한 메시지가 될 수 있는데, 유연함의 폭이 어느 정도 일 것인가 하는 문제가 다듬어지면 좋겠다. 또 그동안의 자산과 관련하여 유연성이 제대로 확보되기 위해서는 정책의 균형성이 중요하다. 균형은 동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계속 진행해 가는 동력이 있는 속에서 방향조정을 해야 힘을 받는다. 정태적인 상황에서 이것 아니고 저거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균형과 실용적인 변화를 접목 시키는 것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비핵·개방·3000의 구체적인 안을 보면 새 아이템이 좋은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오늘 현 교수 발제에도 그렇고, '비핵·개방·3000'이라고 세 가지가 나뉘 있는데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보면 '비핵·개방 3000'이라고 나와 개방과 3000이 분리 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나온다. 개방 3000을 하나로 묶어서 경제 협력이라는 카테고리로 넣은 것으로 보인다. 정확히 이게 뭔지 궁금하다. 이것이 세 개로 되어야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3000은 경제적인 부분, 개방은 북한의 내부적인 질적 전환이고 장기적인 평화 체제와 연결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부분을 여기에 담아야 하는데, 개방 3000을 붙여서 경제협력이라고 해서 개방의 의미가 좀 축소된 것이 아쉽다. 조금 구체화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단계론과 병행론과 관련한 문제는 비핵·개방·3000을 단계로 보지 않는다는 현교수의 지적에 동의한다. 핵의 해결의 과정에서 그 단계에서 연결시키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렇게 하면 비핵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우려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단계의 구체화는 필요하다. 1단계의 2.13합의의 완전 이행에 대해서도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꾸준한 인내를 가지겠다는 말을 했는데 여기서 또 하나 빠뜨릴 수 없는 것은 추동하는 뭔가가 필요한데, 북핵의 해결에 대해서 북미와 6자의 차원이 아니라 남북 관계에서 추동해낼 수 있는 독립변수로 활용할 것이 보완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 현인택 고려대학교 교수

: 비핵·개방·3000이 어디서 분리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통일부가 개방 3000에

점을 안 찍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는 통일부가 좀 더 명확하게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핵·개방·3000은 각각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 ‘비핵·개방 3000’이 아니라 ‘비핵·개방·3000’으로 분리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세 개의 키워드로 생각을 했던 것이 맞다. 3000이 개방이 되어야 하지만, 3000이라는 것은 그 나름대로 독특한 목표가 있는 것이다. 이 세 가지는 독립된 것이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 이것을 단계론과 병행론 관계에서 보면 아주 엄격한 단계론은 아니다. 병행도 같이 들어간다. 3000 플랜은 ‘비핵·개방·3000’의 3단계에서 2단계에도 들어간다. 작년에 문제제기 했을 때 2.13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는 시기였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비핵·개방·3000의 정책은 6자회담이 가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얘기를 하는 것이다. 6자회담의 틀에서 북한 핵문제가 다뤄지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2.13 합의 완결은 싱가포르 합의 이후 후속조치로 핵무기가 없다는 검증까지 가면 2.13 합의가 마무리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이 1단계의 마무리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비핵화에 대한 협상 과정은 그간은 1~3년이 걸릴 수 있지만, 그때는 완전한 비핵화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2.13 합의가 잘 진행되면 북한이 핵 합의 의지가 있다는 판단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되면 비핵·개방·3000 프로그램을 이 사이에 진행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그 당시의 의견이다. 일부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것이 2단계이다. 합의가 이뤄지고 북한 핵문제가 완결되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단계론과 병행론을 같이 나가는 것이지, 앞의 것부터 하고 나중에 하는 것은 아니다. 추동 레버리지에 대해서는 추동하는 레버리지가 필요하다는 것은 동의한다. 그런 점에서 비핵·개방·3000 플랜을 강조하는 것이다. 북미 6자회담에서 따라한다면 2.13 합의를 실행한다는 것으로 따라가면 된다. 북한을 10년 안에 1인당 국민소득 3,000달러를 만드는 것은 자금과 에너지가 필요하다. 국제사회가 협력해서 6자회담에서 합의한 것 이외에 자본과 노력이 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이 남북관계에서 제공할 수 있는 레버리지를 제공한다고 생각한다. 유연한 폭의 문제는 아주 레프트에서 라이트로 가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 당연히 북한이 비핵화를 진전시킨다는 전제하에서 유연함을 발휘해야 한다. 남북문제에 대해서 더디게 간다든지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도 유연함으로 대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에서는 유연함을 구사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 그 폭은 자연스럽게 그 사이에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 기본합의서를 제시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다. 사실은 남북 합의 중

에서 우리 사회에 적어도 하나의 컨센서스가 있다면 남북 기본합의서는 컨센서스가 있다고 생각한다. 6.15 공동선언도 남북이 한 것이지만,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컨센서스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10.4 공동선언도 폭넓은 컨센서스는 없다고 생각한다. 과거에 했지만, 남북기본합의서는 우리에게 사회에 컨센서스가 있다고 생각한다. 안타깝게도 나오자마자 사산이 된 합의서다. 어찌보면 남북이 그야말로 오랫동안 노력해서 만든 중요한 작품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남북관계가 이것을 살리면 순항할 수 있다. 다시 한 번 제고해야할 정신적인 기초이기 때문에 강조한 것이다. 박기덕 소장이 말하신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지금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MB 독트린은 국익을 중심으로 하는 실용주의, 한미동맹을 전략적으로 잘 가져가는 점은 하나의 기본정책이다. 한미간의 정책의 디테일도 함께 가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분명히 추구해야 할 대북정책의 목표방식이 있고, 미국도 그 자체의 목표가 있다. 100% 미국을 따라가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정한 목표와 우리의 국익에서의 판단 가이드라인을 추구하고 지켜갈려고 노력하고 그것을 추구하는데 있어서 한미는 충분한 대화, 상대방의 이해를 구하고 그런 방식을 통해서 가져가겠다는 것이다. 지난 정부는 상당 부분 미국에 따라간 측면이 있었음에도 비판 받은 것은 그것을 하는 방법에서 서툰 점이라고 생각한다. 상대방에 대해서 많은 것을 주면서 지나치게 자극한 문제점이었다. 기본적으로는 국익을 보는 다른 시각도 존재하고 있었다. 우리의 국익의 관점에서 문제를 보고 가되, 한미가 어떤 사안을 놓고 추구하고 있을 때 상대가 협의 협조하는 노력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 원장

: 통일을 위한 우리의 정책과 외교적인 정책도 일치 하지 않을 수 있다. 핵을 벗어나서 비핵화가 지연되거나 했을 때 통일 정책은 다 종속변수로 걸려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토론해보자. 통일·외교 정책결정시 고려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가?

○ 박명규 서울대학교 통일연구소 소장

-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추동력으로서 비핵·개방·3000은 중요한 약속이다. 추동의 가능성 대해서는 공감한다. 한 가지 보완할 것은 실제로 남북관계에서 북의 자립화 성장과 함께 남북관계의 평화문제가 남아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포함

이 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의 경제 성장 뿐 아니라 남북 대치 상황, 북미의 군사적인 대립을 한반도 평화체제로 변화시킬 수 있는 구상과 관련된 연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 비핵·개방·3000에서는 경제적인 자립, 경제 공동체 형성은 있지만 현안으로 정전협정, 평화협정으로 바뀌거나 그런 정치 군사적인 차원에서 평화체제 형성과 관계된 정책적인 포지션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또 하나는 기본합의서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동의한다. 그렇지만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공동선언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정권에 따라서 평가 달라질 수 있고 선택적인 것도 있는데 길게 보면 정권 교체가 우리 사회가 제도화 되었을 때 남북관계에서 합의되는 규정들을 후속 정부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중요한 선택이 된다. 남북관계의 일정한 진전의 틀에서 양 정상에서 합의하는 부분이 가지는 정권 차원과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정권의 교체 과정에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는 중요한 선택이 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정상회담 선언이 의미가 있다. 국민적인 합의 추진기구 관련해서 조직의 형성을 말했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남북갈등을 해소하면서 이 부분을 끌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 현 정부에서는 또 다른 의미에서 정책적인 지원세력을 중심으로 시민사회의 의사가 반영되는 것이다. 지난 정부처럼 실수하지 않고, 국민의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으면 좋겠다. 남북 통일의 부분은 장고하면서 큰 디자인을 필요로 하는데 지난 10년의 틀은 1992년의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이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을 가지고 있지만, 새로운 사고를 해야 되는 것처럼 이 방안을 계속 정신을 살리면서 총체적인 통일 방안과 연결하는 큰 디자인 장기전략 구상의 토론, 현인 그룹, 별도의 관민 합동 협의회가 될 수 있고, 현안에 얽매이지 않고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조직을 만들면 좋겠다.

○ 박기덕 세종연구소 소장

: 외교 일반은 우리나라와 상대방 국가 간의 협상·협약이 많은 데 특히 특정한 외교 정책이 필요하다. 대북 외교 정책은 다면 게임적인 요소가 아주 다분하고 중요하다. 최소한 대북정책은 3면 게임의 외교라고 생각한다. 우리 정부 대표가 북한 당국자와 협상해서 합리적인 결론을 내고,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 북핵문제를 두고는 미국의 동의가 필요하다.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특히 통일 외교 정책에 있어 핵문제 등을 생각하면 북한과의 관계는 3면 게임적인 성격이 있다. 이전 정부에서는 협상 당사자인 북한과의 관계를 중시하였다. 이들과의

신뢰에서 위협을 느끼지 않으면 한반도가 안정적이고 평화유지적으로 갈 것으로 생각한 것 같다. 이전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남한 내부와 미국에 대해서 반대가 있었는데 현 정부는 미국 및 국민과의 관계 주력하는 감이 있다. 고로, 북한 쪽에서 반발하고 비협조하는 경향이 있다. 현 정부는 이 껌을 메워야 한다. 이를 메우는 것이 과제라고 생각한다. 솔루션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냉전 체제 말기에 소련에 대한 군비 경쟁 등의 압박정책을 사용한 것이다. 지금 한반도에서는 북한이 결정적인 선택을 하도록 몰고 가는 것이다. 둘째, 남북 관계를 개선 포용하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포용정책은 국민들의 지지와 컨센서스를 만들어가야 한다.

○ 김일영 성균관대학교 교수

: 하나는 장기적인 통일 방안을 말했는데, 기본적으로 통일부는 모순적인 위상을 가진 부처라고 생각한다. 자기 일을 엄청나게 잘해서 목표를 달성하면 존재가 없어지는 부서다. 통일부 목적은 남북관계를 평시에 관리하는 것과 통일을 달성하는 것이다. 지난 10년간은 후자의 측면은 도외시되고 전자의 측면에만 국한시켜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노태우 정부의 한반도 통일체 방안 이후 공식적인 통일 방안이 없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단계 방안도 개인적인 방안이지 정부의 방안은 아니었다. 있다고는 할 수 있지만, 꺼내지 않았다. 일부러 통일에 대해서는 물어두는 정책을 취했다고 볼 수 있다. 상황이 변하고 해서 급작스럽게 통일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에 대해서 대비하는 과정에서 핵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기미를 보이면 평화체제 구축하는 문제도 장기적인 통일 방안으로 넣어서 생각해야하는 단계다. 급변사태도 대비해야 한다. 지난 정권에서 문제됐던 개념 계획으로 머무는 것으로 합의됐지만, 급변사태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대비책을 만드는 것이니까 이런 것도 포함하고 통일 발생시 여러 국제법적인 문제도 포함해서 장기적인 플랜을 만드는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통일부의 역할 중에 이것이 중요한 역할이다. 이런 부분이 지금이라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것을 해야 한다는 제안을 해야 한다. 전임 정부에서 합의한 것을 어느 정도 계승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있어서 혼자 해석할 때는 기본 합의서를 강조한다는 것은 전임정부의 성과를 단절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부분적인 지속과 단절이 같이 포함이 되어있는 것이다. 단절성 문제가 되는 것은 예컨대, 10.4 공동선언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 정권 말기에 그렇

게 합의할 것은 아니다. 내용상 진전된 것도 있지만, 다음 정부가 감당할 수 없는 것도 협의를 했다. 공동 어로구역 문제 등 이런 것도 장기적인 평화체제에서는 논의되어야 하지만, 현 정부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부분적인 단절이 있을 수밖에 없다. 앞의 두 정상 선언과 기본합의서의 컨센서스를 다시 강조할 수밖에 없다. 기본합의서 강조가 앞의 두 선언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지가 문제다.

○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 원장

: 남북정상선언 같은 것들이 국회 비준 절차를 걸쳐서 매듭을 지어야 하는데 그 절차가 없다. 그렇더라도 남북간의 합의된 이야기는 상대방이 6.15나 10.4정상선언을 신주단지처럼 믿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7년 이상 됐는데 이것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그 위에서 바꾸거나 개정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협정의 정통성 인정 절차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국회 비준한다든지, 정리를 한다든지 정통성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남북기본합의서를 중시한다는 것은 좋은데, 인정을 할 것인가의 문제에서 6.15는 오래 지난 것이기 때문에 사회에서 일정 부분 인정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정상간에 만나서 하는 얘기를 정당성 부여의 차원에서 정리해야 할 것이다.

○ 김일영 성균관대학교 교수

: 국회 비준·동의를 과정이 들어가면, 국제법적 문제 발생이 가능하다. 국회의 비준 절차를 거치면 좋은 것도 많은데, 국가간의 조약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비준을 하면 국제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 원장

: 비준·동의를 하지 않으니까 정권은 넘어가는 데 애매해진다

○ 현인택 고려대학교 교수

: 협의를 이렇게 한다면 이 문제는 문제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지난번도 전 정부가 했던 것을 다음 정부가 전적으로 서포트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지난번 정상회담 성립 과정에서 합의의 내용을 보면 국민적인 합의를 거쳤는가가 중요하다. 합의가 있었다면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적 합의 전제조건은

적어도 탈정치여야 하고, 그야말로 탈이념, 범정부적으로 해야 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지난 번 정상회담의 결과는 결과적으로 훼손되었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 반쪽짜리 합의였다. 후속 정부가 그것을 다 합의 하는 것을 어렵게 스스로 만들었다. 그것을 알면서 한 합의라고 생각한다. 후속정부가 따라가지 못할 것을 알기 때문에 대못을 박은 합의다. 이런 합의는 따라오지 말라고 하는 반어법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바람직한 합의는 아니다. 그야말로 정상회담의 자체 시기 문제가 있어도 내용만을 가지고서도 잘했다라면 나왔을 텐데 아쉽다. 비핵·개방·3000과 연계될 수 있는 플랜도 더러 있다. 여러가지 선후의 문제도 있고 여러가지 굉장히 잘 계획된 플랜을 가지고 할 부분이 있는데 어떤 단계에서 어떤 것을 하는 것이 효과가 극대화된다. 합의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 큰 틀에서 방향성을 가지고 들어갈 부분이 많다. 큰 틀에서 보면 수용할 수 있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툭 던지면 받으라면 국민들이 혼란을 겪을 것이다. 어떤 디테일한 내용을 끌어내서 할 수 있다 없다고 판단하기 힘들다.

○ 김일영 성균관대학교 교수

: 6.15정상선언은 2번밖에 문제가 없다.

○ 현인택 고려대학교 교수

: 3번도 문제다. 이산가족 문제에서 전향자 국군포로를 북한에서 놓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인도주의적으로도 문제다. 선언적인 성격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지난 10월에 있던 것은 정상선언은 구체적인 계획이 들어가 있는데 이는 세금과 연계되는 문제 이런 문제를 큰 플랜을 생각하지 않고 하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것이다. 과연 어떻게 포용하느냐가 문제이다. 이것은 앞으로 시츄에이셔널 한 것이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 플랜은 압박이나 붕괴 정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구체적인 방법은 비핵화 과정과 같이 갈 것이다. 더 구체적인 것은 정책의 집행자가 여러가지 변수를 보면서 그 순간에 결정할 수밖에 없다. 비핵·개방·3000은 6자 회담의 기본 합의를 전제로 깔기 때문에 핵문제 해결이 더 중요하다. 정전 협정 이후에 통일 문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3단계 통일 방안은 말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가 정부가 있는데 통일 방안이 없을 수 없지 않느냐고 생각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한민족 통일 방안 이후 방안에 대해서 통일 방안이 아니더라도 한반도의 장기적인

미래에 대해서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를 준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현인모임, 위원회 등 머리를 싸매고 각 분야에서 정치·군사·외교·안보에서 전방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 원장

: 장기적인 과제, 앞으로의 추가로 포함할 건의 제안으로 비핵·개방·3000 현안 문제 이외의 장기적인 논의 담론을 이어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제언을 했으면 좋겠다. 지엽적인 문제 일 수 있는데, 비핵 이전이라도 인도적인 지원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유효한 것인가?

○ 현인택 고려대학교 교수

: 유효한 상황이다. 지금 북한이 아무 액션을 취하지 않고 있다. 북한이 액션을 취하면 대통령 생각도 그렇고 집행부도 인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를 한다. 적십자 교류 등도 계속 이루어 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 박기덕 세종연구소 소장

: 현 교수 얘기 중 전 정부가 다음 정부가 수용하기 어려운 것을 합의했기 때문에 못박은 것이라는 말에 동의한다. 아웃 고잉 대통령이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다고 당시에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가 내세우는 것은 실용주의이다. 그 합의가 이미 있다. 남북기본합의서가 있는데 지금 현재 정상회담 두 번의 합의문에 대해서 뒤의 두개는 정상간의 합의이고 그 전 것은 총리가 싸인했기 때문에 정상간의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얘기도 있다.(본인주장은 아님) 분명히 중요한 것은 합의를 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우리의 신뢰 문제가 있다. 우리가 아무리 옳지 못한 합의를 했어도 지키는가의 문제는 신뢰문제로 연결된다고 생각한다. 지키는 문제는 정부 최고 당국자가 비준 토론 단계나 재협상을 통하는 것이 좋겠지만, 이런 문제를 부드럽게 해결하는데 좋은 절차를 찾아야 한다. 대통령 주위에서 보좌하는 사람이 적절한 발언을 해서 대통령에게 모든 짐을 주면 안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 원장

: 동의를 거치면 어떻게 되는가?

○ 박기덕 세종연구소 소장

: 국회, 야당, 국민이 있는데 합의를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북한에서는 군부를 변명으로 삼고 있다. 합의 이후에 취사 선택 매커니즘이 있다. 우리는 최고 책임자가 모두 책임지게 제도가 되어 있는 것이 문제가 있다. 보좌하는 사람들이 중간에서 책임을 져야한다. 무엇을 계승 단절 할 것인가? 아무리 잘못되어도 일언지하에 단절을 하면 상대가 다음 약속을 할 때 문제가 있다. 대내적으로도 이런 신뢰성의 위기가 오는 문제를 회피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정책적인 선택을 할 때도 합리적인 프로세스를 통해서 대통령께 부담지우지 않도록 해야 한다.

○ 현인택 고려대학교 교수

: 기본합의서, 정상회담 합의는 총리, 대통령 합의가 차이라는 의견에 대해서 남북기본합의서는 물론 총리가 싸인 했지만, 장기적인 협의를 통해서 총리가 대신 싸인한 것이다. 상당히 국민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한다. 6.15 및 10.4 정상선언은 대단히 정치적인 합의라고 생각한다. 10.4정상선언은 구체적인 사안이 수십 개가 된다. 정상회담에서 이런 적이 없었다. 그것을 합의를 그렇게 하고 국민한테 다음 정부에게 인정 안한다고 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떠나서 정상으로써 무책임한 합의라고 생각한다.

○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 원장

: 덧붙여서 이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달라.

○ 박기덕 세종연구소 소장

: 공은 저쪽으로 넘어간 것이다. 공이 넘어오기 기다리는 것도 필요하다. 우리는 하는 것을 계속 하는 것도 중요하다. 강한 상호주의가 능동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 유연성 발휘하는 부분도 구분을 해서 적절한 릴리즈와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완전히 공을 북한에 던지고 기다리지는 말고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 현인택 고려대학교 교수

: 물이 흐르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공을 넘기고 받는 관

점이다. 조금 기다려보아야 한다.

○ 김일영 성균관대학교 교수

: 정권이 바뀌고 총선까지는 기다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총선 결과도 나왔고 지금 아무것도 안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패를 보고 있는 것이다. 서로 어떻게 할까 생각하는 것이다. Wait and See 해야 하는 시점 이라고 생각한다.

○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 원장

: 급박한 숙제가 없고, 장기적인 숙제를 가지고 있는 시점이다. 문제가 터져서 뭔가를 해야 하는 상황이 지난 정부였다면 지금은 비핵문제가 6자회담으로 갔는데 지금 막 풀어야할 이슈가 없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 김일영 성균관대학교 교수

: 올림픽 끝날 때까지 계속 지금 상황이 갈 것 같기도 하다.

○ 현인택 고려대학교 교수

: 지금은 정중동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내적으로는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는 상황이다.